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성 명

보도일시	2026. 08. 07 배포 즉시	위원장	이수진
담 당	전국여성위원회	문 의	02-2630-7082,7086 womenminjoo@gmail.com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여성계의 우려 공감, 빈틈없는 '피해자 최우선' 중수청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과 관련해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 여성계와 인권 단체에서 제기한 우려의 목소리를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는 과정에서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수사 공백이 발생하거나 피해자 구제 절차가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여성계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수사 지연이나 수사기관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으로 인한 2차 가해, 부당한 불송치 결정에 대한 피해자의 이의제기 권리 위축 등 현장에서 느끼는 불안감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합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독점을 해소하고 검찰 권력을 국민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한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전건 송치 대상인 가정폭력·성폭력·성범죄·스토킹 범죄 등 7대 범죄 사건 피해자가 면담을 신청하면 검사는 의견을 최대한 들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피해자는 경찰 수사가 지나치게 지연되거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수사기관 책임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사건이 불송치될 경우에는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약자·범죄피해자 권리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 단체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에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빈틈없이 보완하겠습니다.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수사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도록, 수사 공백이나 부실을 차단하는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사법 개혁으로 범죄 피해자 보호가 약화되는 일이 없도록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새롭게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수사기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중수청은 여성과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성폭력 수사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와 보완을 수행할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에 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 관계인 의견 청취 및 이의신청 제도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구체적 방안 마련을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사법 체계의 변화가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중수청 준비 과정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입법적·제도적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6.08.07.(금)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이수진)